

# 신현송 총재, 내일 첫 금통위 주재

## 하반기 금리경로 등 메시지 '주목'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간담회 관심 집중  
수정 경제전망·점도표 함께 공개  
시장, 기준금리 동결 전망 우세



### ◆ 물가·환율·가계빚 등 변수 산적

한은이 인하론을 쉽게 꺼내기 어려운 배경은 물가와 금융안정 양쪽에 있다. 4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2.5% 올라 1998년 2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도 6.9% 상승해 2022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생산단계 물가가 뛰면서 고유가와 고환율이 소비자물가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셈이다.

품목별로도 부담은 뚜렷하다. 석탄및 석유제품은 전월 대비 31.9%, 화학제품은 6.3% 올랐다. 국내공급물가지수도 전월 대비 5.2% 상승했고, 원재료와 중간재가 각각 28.5%, 4.3% 올라 비용 압력이 생산단계 앞쪽에서 강하게 나타났다.

대외 여건도 우호적이지 않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4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과 중동 분쟁에 따른 공급 차질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키우고 있다고 평가했다. 높은 물가와 불확실성 탓에 현재 정책 기조를 예상보다 오래 유지해야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뒤로 밀리면 달러 강세와 원화 약세 압력은 이어질 수 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안팎에서 등락하는 상황도 한은의 금리 인하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다. 환율 불안은 수입물가와 기대인플레이션을 자극해 물가 대응 필요성을 더 키울 수 있다.

금융안정 변수도 만만치 않다. 1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1993조1000억원으로

2000조원 턱밑까지 늘었다. 최근 소비자심리지수는 106.1로 낙관권을 회복했고, 주택가격전망CSI도 112로 전월보다 8포인트 상승했다. 금리 인하가 주택담보대출과 자산가격 기대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부담이 남아 있는 셈이다.

### ◆ 기준금리보다 점도표

이번 금통위의 핵심은 기준금리 자체보다 신총재의 첫 메시지다. 물가가 뛰면 얼마나 강하게 대응하는지, 환율과 가계부채를 금리 결정에 얼마나 반영하는지, 성장 회복을 어느 정도까지 확인하려 하는지가 첫 기자회견회에서 엿볼 수 있다.

시장 관심은 점도표에도 쏠린다. 2월 점도표가 인하 가능성을 남긴 표였다면, 5월 점도표는 인하 점이 얼마나 사라지고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점이 얼마나 늘어나는지가 핵심이다. 금리 경로의 평균값과 중위값, 상단이 이전보다 위로 움직일 경우 시장은 이를 사실상 인상 신호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수정 경제전망도 중요하다. 반도체 수출 호조가 성장률 전망을 끌어올리는 반면, 생산자물가 급등과 고환율은 물가 전망상향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성장과 물가 전망이 동시에 올라간다면 한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를 명분은 더 약해진다.

첫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되더라도 점도표와 경제전망, 총재 발언이 위쪽을 가리킨다면 시장은 이를 매과적 동결로 해석할 공산이 크다. 신현송 체제 첫 금통위는 동결 여부보다 한은의 다음 금리 경로를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metro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소 설치  
들이 사전투표소를 설치하고 있다.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일주일여 앞둔 26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작업자들이 사전투표소를 설치하고 있다. /뉴스

## 산업부 “정부 비축유, 직접 방출 신중해야”

주중 정유사 손실보전 기준 고시

정부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긴급 비축유 공동 방출 합의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부 비축유를 직접 방출하는 데 대해서는 신중한 기조를 유지했다. 이미 민간 정유사들이 비축유 대여(스왑) 제도를 통해 원유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있는 만큼, 국가 최후의 보루인 정부 비축유는 아껴두겠다는 전략이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보실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동전쟁 대응본부’ 일일 브리핑에서 “정부 비축유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며 방출해야 된다”며 “현재는 비축유 스와프 제도를 통해 충분히 잘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IEA 합의에 따라 오는 6월 8일까지 총 2246만 배럴의 비축유를 방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양 실장은 “정부의 비축유 방출은 계속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면서도 “민간 정유사들과 소통을 해봤을 때 민간 정유사들도 스와프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정부는 비축유 방출에 대해 크게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실제 비축유를 무리하게 푸는 대신, IEA 분담 의무를 민간 의무 비축

일수 조정’ 등 유연한 방식으로 이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양 실장은 “정부 비축유는 최후의 수단으로 신중하게 방출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비축유 스와프를 활용하고 IEA 비축유 방출 참여는 민간 의무 비축일수 조정이나 다른 방안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참여할 지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정부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보전 기준 고시를 이르면 이번 주 내로 마무리할 방침이다. 현재 정유업체는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을 기준으로 기회비용까지 반영해 손실을 보전해달라고 요구하는 반면, 정부는 실제 투입된 ‘원가’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부는 가상에 근거한 기회비용까지 국민 형세로 보전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 확고해, 원가 기준 정산 방침을 담은 고시안을 조만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양 실장은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손실 보전 기준과 고시안은 이번 주 안에 마무리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고 전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metro

## 李 “올해, 잠재성장률 반등 원년으로”

국무회의·비상경제점검회의  
공공기관 이전 등 동남권 투자 확대  
“양극화 완화 등 구조개혁 본격 진행”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중동 전쟁 이후 하반기 경제 상황과 관련해 “올해가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이 되도록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바탕으로 치밀하고 속도감 있는 정책 대응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23회 국무회의의 결 제10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중동전쟁 장기화 등 대외 여건의 어려움에도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고 성장하면서 올해 명목성장률이 10%에 육박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어 “이처럼 달라진 상황을 반영해서 하반기 경제 전략을 세밀하게 수립해야겠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물가 안정에 최우선적으로 주력하고 중동 전쟁 이후 상황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겠다”며 “양극화 완화 등 구조개혁 또한 본격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은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며 “국민이 맡긴 세금과 권력을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제대로

잘 사용하는게 바로 우리의 책임”이라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해수부에 이어 HMM도 이전이 확정됐다”면서 “동남권을 세계적 해양 경제권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오래전부터 검토됐던 다른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추가 이전도 신속히 추진해야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동남권 투자공사 신설, 항만·항공 인프라 확충, 해양산업 기반 강화 같은 과제도 완수해야 한다”며 “동남권이 남부 해양수도 중심으로 거듭나 국토 균형발전과 해양강국 미래를 개척하

는 쇄빙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미래형 첨단강군으로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인공지능과 드론기술 도입을 가속화하고 미래 국방력 핵심전략자산인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속도를 내야겠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튼튼한 안보는 글로벌 초격차 경제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토대”라며 “각자도생과 약육강식의 냉엄한 국제 현실에 맞서서 국방력을 한층 강화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또 “연구개발 예산의 지속적인 확대와 핵심 부품 국산화, 민간 협력 체계 강화 등을 통해서 첨단국방의 근간인 ‘K-방산’ 육성에 국가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로봇과 드론, 우주 등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할 미래의 신안보 혁신 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주적 국방 의지가 있어야 친구도 우리를 존중하고, 동맹도 더욱 굳건하게 유지될 수 있다”며 “한미 동맹의 건강한 발전을 견인할 전시 작전권 환수를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서예진 기자 syj@



metro

## 대한상의, 수소 생산 등 규제장벽 완화

수소생산 시스템 등 12건 실증특례

청정수소 생산과 수소 인프라 구축을 가로막던 규제 장벽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완화되면서 생산비를 낮추는 차세대 수전해 기술과 지하형 수소 기반시설 구축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26일 산업통상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총 12건의 실증특례가 승인됐다고 밝혔다. 대한상의가 지원한 과제는 ‘고체산화물 수전해기를 포함한 수소 생산 시스템’과 ‘기체수소 기반시설 지하화 실증’ 등 3건이다.

포스코홀딩스 컨소시엄이 신청한 고체산화물 수전해기(SOEC) 기반 수소 생산 시스템은 이날 실증특례를 받았다. SOEC는 뜨거운 수증기를 고체 세라믹막을 이용해 수소와 산소로 분리하는 기술이다. 기존 수전해 방식보다 전력 소모가 적고 제철소나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열을 활용할 경우 생산비용을 낮출 수 있다

는 점이 강점이다. 포스코홀딩스 컨소시엄은 전남 영광군 전남테크노파크 수전해성능평가센터에 100kW급 고체산화물 수전해기 시스템 1기를 구축해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수소 기반시설 지하화 실증도 함께 추진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컨소시엄은 수소저장용기와 연료전지 등 기체수소 기반시설을 지하공간에 설치하고 저장·공급·발전 과정을 검증한다. 이번 실증은 관련 안전장치를 갖춘 지하 설비에서 수소 발전이 가능한지를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컨소시엄은 경기도 평택 한국청정수소진흥연구원 내에 지하화 기체수소 기반시설 1개소를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성장본부장은 “수소 생산비용을 낮추는 기술을 통해 청정수소 생산, 수소환원제철, 산업공정 탈탄소화로 가는 디딤돌을 놓는 셈”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metro